

국내 아동보육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이 사 라(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복지학과)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화두이다. 선진국에서는 사회가 출산과 육아부담을 떠안기 시작하면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보육비용에 대해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출산휴가 외에 1년간의 육아휴가도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는 유급으로 지원한다. 미국과 한국만 무급이다. 미국은 육아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시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성을 차별한 기관이나 기업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여성의 고용뿐만 아니라 승진에서도 차별 금지를 강조해 직종의 성별분리 현상을 완화시키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성공한 국가로 꼽힌다. 미국의 출산율(2.1)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것은 이민을 활발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이 한 몫을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일과 가정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이다.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진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50대 후반에 들어서야 감소한다. 그러나 한국은 20대에는 64.4%였다가 30대에 53.8%로 10%포인트 이상 뚝 떨어진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직장 기혼여성은 출산 이후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상당수가 일을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출산은 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에게 손해가 된다. 이렇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최대한 늦추면서 되도록 적게 낳으려고 한다. 이에 따라 1970년 4.53이었던 출산율은 1980년 2.83, 1990년 1.59로 급격히 떨어졌고 요즘은 1.19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한 기혼직장여성들의 고생을 본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독신을 선택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초혼연령은 1960년 21.6세에서 작년에는 27.5세로 올라갔다. 초혼연령이 늦어지면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앞에서 제시된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보육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이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육아문제가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대개 취업여성, 출산, 육아, 인구증감률 등의 변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이들 변수는 한 나라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야기하는 사회적인 과장으로 인해 사회적관심이 보육이라는 영역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

내 아동보육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주제발표는 사회적으로나 시류적으로 매우 적절한 주제선택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1960년대 이후 출판된 총 1,274편의 보육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중복된 논문과 연구의 주제와 관계없는 논문들을 삭제한 후 총 907편의 논문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논문 수집은 국내학회지 웹DB 중 한국학술정보(KISS)와 누리미디어 학술데이터베이스(DBpia)의 두 자료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이 두 가지 웹DB는 대부분 학회지나 대학간행물,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위논문이나 전공분야 서적 등을 모두 검색하여 분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분석에서 빠진 보육관련 논문들에 대한 연구동향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선택한 방대한 분량의 검색방식과 조금 다른 식의 접근으로, 어떤 하나의 학회지(예. 보육관련 학회지)를 선정하여 보육에 관련된 연구논문만을 검색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해보는다면 좀 더 연구주제별, 내용별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자의 분류방식으로는 여러 주제를 포함하는 논문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연구문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고 했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금 복잡한 절차이기는 하나 직접 연구자에게 보내서 분류결과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보육프로그램 인식과 보육현황 인식, 혹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와 전체 보육평가 등에서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논문의 예를 하나씩 들어 함께 제시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분류작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논문의 주제별 분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연구방법(예: 자료수집방법 - 질문지, 면접법, 관찰법 등), 연구대상, 연구주제, 분석방법(예: 질적, 양적 방법)등에 따라 나누어 분류한다면 좀 더 많은 연구경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보육논문에 대한 동향분석을 처음 시도한 연구로써 현재 보육학 연구의 흐름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자는 분류기준 선정 시 연구자의 주관적 흥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육학 관련 서적들의 목차를 준거로 삼았고,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분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분석기준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한편, 기존의 보육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해서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아동학적 접근으로 보육의 효과가 아동 및 부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유아교육학적인 접근에서 많이 시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연구들, 사회복지적인 접근에서 복지정책의 효과와 정책분석에 대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에서 제시한 주제 및 세부영역별 분석기준을 보면, 보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미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나 효과 분석이라든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직무관련내용, 보육서비스가 아동이나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 등 그 세부내용들이 어떻게 보육정책과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문은 별로 없다. 보육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책 및 제도 분석, 개발에 관한 연구들로 보육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의 영유아들과 그 부모 및 가족에게 어떤 정책과 어떤 혜택이 가장 적절하게 개발되어 제공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다루어질 수 있는 논문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어린이집 등의 기존 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효과는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으나 과연 보육시설을 필요에 의해 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예를 들어 보육시설이 어떤 제도나 정책의 영향으로 늘어가고 어떤 제도의 영향에 따라 감소되어 가는지 정보를 주는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존의 출산정책과 맞물려 세 번째 자녀의 보육지원을 100%하겠다는 정책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런 모든 결정과정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는 어떤 사회적 수요가 반영된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여러 보육정책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함께 취합되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할만한 연구들이 되었는지, 보육시설의 확대 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얼마만큼 효과를 보았는지(참고: 직장만족도가 증가했는지를 본 연구는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참여가 얼마만큼 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음)등과 같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보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연구결과물들이 필요하다. 즉,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어야 하는, 좀 더 거시적 안목에서의 역할을 아동학 연구자들이 해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